

우리가 꿈꾸는 나라 _ 노회찬

우리의 전직 대통령은 몇명인가

p.22: 해마다 9월이면 허리케인이 미국 남부를 훑고 지나가면서 많은 이재민이 발생합니다. (중략) 전직 5명과 현직 1명이 한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모인 이유는 미국인들에게 호소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허리케인으로 고통을 겪는 시민들에게 후원하자는 모금 운동을 벌이는 자리였던 것이지요. (중략) 그때 제가 처음으로 우리나라의 전직 대통령은 몇명인지, 살아 있는 전직 대통령은 몇명인지 세보았습니다. 몇명입니까? 4명입니다. 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 그런데 4명 중 2명은 갔다 왔고, 2명은 가 있고...

헌정사 70년, 개헌의 역사

p.27: 국민을 위했던 독재자를 위했던, 헌법 개정의 역사가 오늘날 우리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있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어떤 길을 거쳐 여기에 왔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것은 무엇인가, 대한민국이 어떤 길을 거쳐왔는가. 아홉번의 헌법 개정을 거쳐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아홉번의 개헌 중 국민을 위해 이뤄진 세번의 개헌 외에 나머지 여섯번의 개헌에 대해 살펴보지요.

촛불이 준 과제들

p.38: 정유라가 페이스북에 남긴 짧은 글은 대폭발을 연쇄시켰습니다. “억울하면 부모 잘 만나라, 돈도 실력이다.” 왜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을까요? (중략) 우리가 화를 낸 데에는 두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정유라가 남긴 글이, 그게 사실이라서 그렇습니다. 또다른 이유라면, 그 글이 사실인데 그러한 사실이 말이 되느냐는 것이지요.

불공정의 해소는 검찰부터

p.50: 저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법개혁, 검찰개혁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국민이 사법부가 공정하다고 여기게끔 해야 합니다. 불공정한 일들이란 결국 권력자, 강한 자들이 더 많은 것을 탐하는 과정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사법부가 강자에게 관대했던 관행을 깨고 제대로 처벌하면 사회 전체에 영향이 미칠 것입니다. (중략) 다른 나라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왜 미국에는 이재용 부회장 같은 사람이 없을까요? 법원에서 유죄라고 판단한 이재용 부회장의 잘못을 미국의 양형기준표에 적용해서 형량을 계산해보면 대략 24년 4개월이 나옵니다. 알다시피 우리 법원은 1심에서 5년, 2심에서 집행유예였지요. 형량 24년 4개월이란 다시는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 미국의 중요한 재판, 엔론 회장 24년형. 일치하는 사례.

일한 만큼 먹고살 수 있는 나라

p.58: 많은 나라들이 낙수효과 정책을 써왔지만, 2008년의 미국 금융위기 이후 이 정책을 쓰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이 정책을 중시해왔던 미국이나 독일도 오바마 대통령과 메

르켈 총리가 공식적으로 실패한 정책이라고 인정했지요. IMF조차도 이 정책을 폐기했습니다. (중략) 돌아와서, 낙수효과 정책의 흔적이 가장 많이 남아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IMF 외환위기 이후 우리 사회에서 경제적 격차가 점점 더 많이 벌어지게 된 원인이 낙수효과 정책입니다. 이 정책의 가장 큰 폐단은 강자만 살리고 약자를 살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위기에서 살아난 강자들이 경제적 이익을 독식해버린 탓에 기대했던 ‘낙수’는 아예 일어나지 않았지요.

p.63: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는 데는 크게 두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세금을 많이 걷어서 복지를 늘리는 것입니다. 150년 전에 생겨난 전통적인 방식이지요. 2차 분배, 또는 사회적 분배라고도 부릅니다. 이 방법은 어찌 보면 속 편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중략) 일하는 사람들이 세금을 내야 하는데, 실업자가 늘어나고 있지요. 결국 세금으로는 해결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렵고 복잡하더라도 실업자가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 구조적 해법을 몇년 전부터 ‘경제민주화’라는 말로 부르고 있지요. 이게 격차를 해소하는 두번째 방법입니다.

최저임금이 평등의 답이 될 수 있을까

p.68: 사실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국회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독일과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을 비교해보면,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평균임금은 독일 노동자의 절반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국회의원은 어떨까요?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임금은 독일과 같습니다. (중략) 국회의원은 자기 월급을 자기가 정하는 직업입니다. 그간 자기 월급을 계속 올렸으면서, 최저임금을 올리는 데는 나라가 망할 것처럼 굴면서 벌벌 떨고 있지요.

p.69: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을 두고 매년 전쟁을 벌이는데, 다른 나라들은 어떨까요? 호주는 1년에 한번씩 최저임금을 발표합니다. 우리나라와 다른 점이라면 호주에서는 최저임금에 두 종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규직 최저임금이 있고, 비정규직 최저임금이 따로 있지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은 비정규직 최저임금이 더 높다는 사실입니다. (중략) 영국에서는 전문직으로 취업할 때 회사에서 두가지안을 제시합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중 선택하도록 말입니다. 정규직은 고용이 보장되는 반면, 비정규직은 회사의 필요에 따라 해고될 수 있습니다. 그 대신 비정규직의 연봉은 정규직의 세배입니다. 고용 보장 또는 높은 급여라는 선택지를 주는 것이지요.

얼마나 나눠쓸 것인가

p.74: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열심히 생산한 GDP 중에서 얼마나 나눠쓰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28퍼센트를 나눠쓰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은 GDP 중 30퍼센트 중반의 비율을 나눠쓰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GDP 중 51퍼센트, 스웨덴은 58퍼센트를 나눠쓰고 있지요. (중략) 제가 이렇게 다른 나라를 예로 들면 어떤 분은 그 나라들의 국민소득을 이야기합니다. 국민소득이 높은 나라니까 복지가 잘된다는 말이지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국민소득이 높아서 좋은 복지가 가능하다면, 왜 프랑스가 미국보다 대학교 등록금이 싸겠습니까. 미국의 등록금이 더 싸야지요. 복지는 소득보다 정책 방향에 달린 문제입니다.

전쟁은 선택지가 아니다

p.85: 극우라면 모를까 건강한 보수라면 절대 전쟁을 고려해서는 안 됩니다. 보수든 진보든 평화와 안전을 추구해야 합니다. 예컨대 유럽에서도 보수와 진보의 의견이 갈리는 문제는 경제나 복지입니다. 전쟁도 불사하자는 주장은 나라를 망가뜨리자는 것일 뿐 보수라는 이름으로 용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기억했으면 합니다. 평화란 의견이 갈릴 수 없는 문제입니다.

변화는 정치에서 시작된다

p.92: 본래 선거제도란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 등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벨기에, 네덜란드, 핀란드, 스웨덴, 이스라엘, 이 나라들의 선거제도에는 조금씩 다른 와중에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의 지지율이 5퍼센트인 정당은 의석수도 5퍼센트만큼 갖는다는 것입니다. 지지율과 동일한 의석을 차지해야 비로소 국회가 국민을 대변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p.92: 잠깐 다른 이야기를 하자면, 보수 야당에서는 제왕적 대통령제 폐지를 위해 사실상 실권을 갖는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뽑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대통령에게는 국가원수로서 의전적인 권한만 주고, 장관을 임명하고 통솔할 권한은 총리에게 주며, 그 총리를 국회에서 뽑자는 것이지요. 저는 이런 개헌안에 반대합니다. 앞으로 대통령을 내기 어려워리라고 예상한 보수정당이 꺼낸 교육지책에 가깝다고 봅니다.

p.94: 영국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의 복지제도는 진보정당만의 공이 아니라 보수정당이 함께 노력한 결과물입니다. 애초에 복지라는 개념을 처음 만들어낸 사람들이 비스마르크를 필두로 한 독일 보수정당이라는 사실을 떠올리면 당연한 일입니다. 복지라면 덮어놓고 반대하고 재벌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것은 결코 건강한 보수가 아닙니다.

개헌과 권력구조

p.97: 물론 우리나라 대통령의 권한이 미국이나 다른 나라보다 많은 것은 사실이고, 대통령 권한을 줄일 필요도 있습니다. (중략)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분산된 권력은 국민, 그리고 지방으로 가야 합니다.

p.100: 제가 구한 오렌지카운티의 투표용지를 살펴보니, 유권자가 투표해야 하는 항목이 모두 26개였습니다. 미국은 노년층이 26개 항목에 투표하는데, 한국은 많아야 8개에 불과합니다. 26대 8, 저는 이 숫자가 미국과 한국의 국민이 지니는 권력의 차이를 상징한다고 봅니다. (중략) 미국은 입법 과정에 유권자들의 뜻을 반영하는데, 우리는 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의 판단력이 미국보다 떨어질까요?

참여가 세상을 바꾼다

p.108: 촛불의 가장 큰 의의는 무엇일까요? 잘못된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감옥으로 보낸 것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정권 교체를 총칼을 든 군인이 아닌, 촛불을 든 시민들이 민주

주의 절차를 지키며 이뤄냈다는 점입니다. 민주주의란 시스템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생업 또는 하고 싶은 일에 전념해도 시스템이 잘 작동하면 나라가 문제없이 운영될 수 있습니다. (중략) 사람들이 생업과 학업을 내팽개치고 주말을 반납하면서 광장에 나온 것은 시스템이 망가졌기 때문입니다.

묻고 답하기

Q: 대학 서열화와 관련된 불공정과 불평등, 교육에 있어서 불평등을 어떻게 해소하면 좋을까요.

A: 저는 교육에서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두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첫번째, 대학교육 정책을 바꿔서 서열화를 해소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제안하면 양질의 국립대학교를 늘리는 것이지요. (중략) 학벌과 학력에 따른 채용 차별 해소, 이것이 불평등을 없애기 위한 두번째 방법입니다.

Q: 비정규직과 취업난, 일자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A: 지금도 많은 언론들, 특히 보수언론들이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어낸다. 대기업이 만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숨은 이야기가 뭔가 하면, 그러니 대기업 좀 잡아가지 마라, 대기업 지원을 많이 해라, 세금 좀 깎아줘라, 이 말입니다. 과연 대기업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까? 얼토당토않습니다. (중략) 우리나라와 경제 수준이 비슷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일자리는 공공부문과 정부가 주도하는 사업에서 만들어집니다. 그간 보수정당과 보수언론이 이야기하던, 정부가 일자리를 만들 수 없다는 주장은 다 거짓입니다. (중략) 일자리에서 중요한 문제, 두번째는 과도한 임금 격차입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은 헌법에 못박더라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Q: 우리나라의 가장 심각한 노동 문제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A: 우리나라 일자리 문제들 중에 가장 나쁜 것이 예전에는 강제노동, 아동노동이었습니다. 지금은 파견노동입니다. 비정규직보다도 심각한 고용 형태이지요. 파견노동이 문제인 이유는 중간착취가 합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중략) 당장 파견을 아예 금지할 수는 없다고 해도 지금보다는 규제 강도를 높여야 합니다. 파견직을 살펴보면 대체로 힘들고 위험한 일들이 많습니다. (중략)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위험한 일을 하면 돈을 더 주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들은 그런 상식을 지키고 있습니다. (중략) 일단 부당하게 적은 임금을 주거나 격차가 있는 경우부터 개선하고, 나아가 앞서 말한 대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Q: 공적 영역에서 자영업자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일은 없을까요.

A: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비율이 얼마나 비정상적인가 하면, 무려 미국의 4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경제활동 인구 대비 자영업자 비율이 28퍼센트인데, 미국은 7퍼센트에 불과하지요. (중략)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너무 많으니 줄이면 될까요? 시험을 어렵게 만들면 줄어들까요? 미봉책일 뿐입니다. 근본적으로는 양질의 일자리가 많아져서 자영업자들이 다른 분야로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중략) 노동시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역시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중략) 중요한 것은 정부가 선도적으로 나서는 것입니다.

약전, 멈추지 않을 진보정치의 꿈, 노회찬

p.164: 노회찬의 길이 항상 옳았다고 할 수도 없지만, 항상 옳은 단 하나의 길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그를 비판하는 사람이든, 지지하는 사람이든, 매 시기의 상황마다 옳다고 판단되면 연대하고, 틀리다고 판단되면 비판하면서 큰길을 함께 걷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무조건 의견을 일치시켜야 한다, 통일해야 한다는 전체주의적이고 폭력적인 논리보다는, 우리 안에서조차도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토론과 합의를 통해 조화를 이루는 것이 진정한 진보운동의 방식이 아닐까?

⇒ 노회찬 아까워 했어. 살아있을 때 보지는 못했지만, 노무현 재단 안 해도 노회찬은 지원 했어.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64765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7/20/2018072001630.html

<https://m.khan.co.kr/article/200904151809485#c2b>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352674.html>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352472.html>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357361.html>